



축산업계 현안 해결 위해 축산인이 나섰다!

‘한·미 FTA협상 저지, 식품안전처 신설 반대, 농지법 개정, 도축세 폐지, 가축분뇨 자원화, 축사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해결 촉구

축산인들이 축산업계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남호경)는 지난 8월 24일 경기도 이천(설봉호텔)을 시작으로 25일 충남 천안(상록리조트), 29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9월 1일 대구(대구 컨벤션센터)에서 ‘2006년 축산현안 해결을 위한 축산인 결의대회’를 갖고 현재 축산업계가 안고 있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번 결의대회는 축산농가는 물론 업계 관계자들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 2, 3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2부 결의대회에서 축산인들은 ‘축산인 생존권 수호를 위한 결의문’을 통해 ‘한·미 FTA협상 저지, 식품안전처 신설 반대, 농지법 개정, 도축세 폐지, 가축분뇨 자원화, 축사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등 6대 축산 현안을 반드시 해결하는데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현.장.취.재.



한자리에 모인 축산인들은 현재 축산업계가 안고 있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결의를 다졌다.

또한 정부는 축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은 뒷전인 채 새로이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로 축산업을 위축시키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규탄하고, 국회와 정부는 119조원이라는 허울로 농가를 기만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농정으로 거듭나야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3부에서는 장대현 한·미 FTA 저지 국민운동본부 조직투쟁팀장의 한·미 FTA 특강을 통해 '한·미 FTA가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한·미 FTA 저지를 위해 서명운동은 물론 민주노총 등과 함께 '축산인 백만명이 함께 하는 규탄대회'를 열어 축산인들이 축산업 수호에 직접 나설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이번 결의대회에 이전에는 이규택 의원(한나라당), 천안에는 홍문표 의원(한나라당), 강기갑 의원(민노당)이 각각 참석해 국회 차원에서 축산인의 현안 해결 노력을 뒷받침할 것

을 약속했다.

남호경 축단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되면서 축산업이 가장 큰 피해자로 지목돼 향후 협상에 따라 한국 축산업이 받을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대책없는 졸속적인 협상이 되지 않도록 축산인 개개인이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개진해야 하며, 앞으로 협상과정을 주시하면서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외에도 도축세 폐지를 비롯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육기반 확충을 위한 농지법 개정,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농림부 관리 일원화, 환경과 축산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효율적인 축산경영과 동물복지 증대를 위한 기반시설 부담금 면제 등 축산업이 당면한 현안을 먼저 해결해 우리 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